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 관점에서 본 전업주부정책

The Full-time Housewives Support Policy from the Perspectiv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김 선 미 · 이 기 영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족복지전공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Kim, Seonmi · Lee, Kiyoung

Family Welfare Major, Kwangju Univ. ·

Dept. of Consumer Studies, Seoul National Univ.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iscuss how to develop policies to support social participation by full-time housewives, from the perspectiv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This study focused on three areas of potenti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a) labor force participation (b) social education (c) volunteerism. It analyzed the related "social infrastructures," especially labor market situation and child care systems. The current governmental policies and other social programs implemented by various institutions as well as the relevant literatures were reviewed. The preliminary policy proposals outlined in this study were evaluated by the policy developers and experts through several hearings and discussions. Programs propos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 (a) programs to support housewives who wish to find employment or create a self-owned business, (b) educational programs exclusively offered for full time housewives, and (c) programs to award certificates and rewards and to create paid employment tied to volunteer work. In addition, the ways how to ameliorate the gender discrimination by changing the labor and social environments and institutionalizing the child care were discussed.

Key words : full-time housewives, human resource, labor force participation, social education, volunteerism,

I. 서론 : 전업주부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의 의의 및 연구방법

우리 나라의 발전은 인적자원¹⁾의 개발과 활용에

달려 있으며 그 동안 저개발되고 사장되어 온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관건이라는 사실은 자주 지적되어 왔다(매일경제신문, 2001). 본 논문²⁾에서는 인적자원가운데 전업주부인적자원의 사회참여 지원정책 개발과정과 관련하여 국내정책현황과 문

Corresponding author : Kim, Seonmi
Tel : (062)670-2361, Fax : (062)670-2180
E-mail : yupy1005@hanmail.net

- 1) 인적자원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기능(skills)과 재능(talents)과 능력(capabilities)으로서 지식과 건강, 감정(feeling) 돌봄(caring) 등이 그 예이며 이러한 인적자원은 사용을 통해 증가한다. 사람들이 목표를 성취하고 다른 자원들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능력과 자질의 총체는 인적자본이라고 부른다(Elizabeth B. Goldsmith, 2000:81).
- 2)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인적자원 비전2005」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는데 총 16개 팀 가운데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팀을 포함시켰다. 연구자는 민간부문 전문가네트워크에 속하여 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2005년까지 추진하게 될 정책을 제시하는데 참여하였다.

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정책들의 사례도 함께 살펴본 후에 시행할 만한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업주부인적자원은 여성인적자원 가운데서 규모가 크면서도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 동안 전업주부가 인적자원개발의 대상이 되지 못한 이유는 전업주부가 사적인 부분인 가정의 영역에 속하므로 공적인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국가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인식은 전업주부개인들의 삶을 가정에 제한하고 그들의 사회적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가족이기주의의 주변역할을 하게 하거나 정신적 우울증에 시달리게 하고 부동산투기와 사교유열풍 등에 지나친 관심을 쏟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는 건전한 방향으로 사회참여가 표현됨에 따라 전업주부가 국가가 지원해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2001년이라고 할 수 있고 본 논문은 그 동안 산발적으로 추구되어 온 주부들의 노력을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승화시켜 힘과 속도를 더하고자하는데 의의가 있다.

전업주부의 규모를 보면 2000년 현재 6,252천명으로 전체인구 47,275천명의 13%이며 전체 여성인구 23,831천명의 26.2%이다(통계청, 2001). 15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세가 2002년에 48.2% 2005년에 49.72% 2010년에 51.9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정진화 외, 1999) 향후에도 기혼여성가운데 전업주부의 비율은 감소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전업주부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은 주부와 사회 모두에게 유익하다. 고립되어 무보수 가사노동만을 하는 주부들의 경우 더 이상의 발달이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그들의 인적자원은 저 개발되고 활용 또한 가정내부로 제한 받기 쉽다. 우리사회에서 소위 '아줌마'는 전업주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³⁾를 담은

말로 통용되는데 그 속에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인격체이며 반사회적인 가족이기주의의 표상이라는 함의가 어느 정도 담겨져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주부들은 가사노동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요, 소비사회의 한 기구요, 불충분한 복지 제도를 떠받치는 완충자요, 사회관계망의 형성 및 유지자 역할을 해 왔다(김선미 외, 2000).

그러나 전업주부들의 인적자원의 개발기회는 제한되어 있고 그들의 주체적인 필요는 도외시된 채 다만 가정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활용되어 왔음이 위의 모든 측면에 내포되어 있다. 전업주부들의 참된 필요가 반영되고 사회적인 요구와의 균형 속에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한다면 첫째, 주부개인의 발달을 돕고 가족 내 역할을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수행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게 할 것이다. 둘째, 주부들로 하여금 가사노동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회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부의 주체적인 사회성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고⁴⁾, 사회적으로 주부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사회적인 필요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전업주부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와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나라 여성들의 노동생애주기는 M자형인데 이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취업단절 및 재취업을 의미한다. 가정생활주기상 자녀양육시기에 전업주부의 생산성은 최고조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할 때 다음 세 가지 지원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전업주부직의 수행을 돕는 차원에서, 주부의 가정경영활동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가정경영전반에 걸친 지식과 정보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개발로 가능하다. 둘째

3) H. Z. Lopata(1980; 364-369)에 따르면 사생활을 추구하는 고립된 단위로 가정을 제한하고 가정주부를 낮은 계급으로 수용하는 면 그리고 현대도시생활이 제공하는 다차원성을 향한 기회로부터 충분한 이점을 못 누리게 하는 문화지체현상으로 인해 주부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실체는 주부는 그 자체로 낮은 계급이며 교육받지 못해서 사회생활에 대해 무관심하고 수동적이며 이웃에 대해 적대적이며 세계를 기꺼이 엘리트집단에 일임하려는 모든 특성들의 복합체로 비춰진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주부들의 생활주기전반을 가로지르며 변함없이 자신과 타인들에게 작용하고 있다.

4) 서울시 전업주부 859명을 조사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회적 활동시간이 심리·정서적 안녕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미쳤다.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이라도 경제적 역할을 하는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존재의의를 확인시켜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하였다(장혜경·김영란, 2000).

로는 전업주부의 취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취업단절을 막고 주부의 노동시장참여를 지속시키기 위한 보육관련 인프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결혼기피관행으로 인한 기혼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 아울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 직업복귀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양육을 어느 정도 마치고 자신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주부들에게 인적자원의 개발기회와 활용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취업과 창업 그리고 자원활동분야가 있고 사회교육을 통하여 대안으로의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⁵⁾. 현실적으로 전업주부들은 사회참여의 대안으로 취업과 사회교육 그리고 자원활동을 들고 있는데 사회교육은 취업이나 자원활동으로의 연결고리가 된다(정현희·구혜령, 2001 ; 박숙자, 1994).

연구방법은 전업주부들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을 따라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 여성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정부의 해당 부서의 정책을 검토하였고,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전국여성노동자협의회, 여성민우회 등 주부교육이나 자원활동과 관련된 사회단체 및 기관 등의 실행사항을 검토하고 관계자를 인터뷰하였다. 외국사례를 비판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해외 거주 전문가들의 연구지원을 받았으며 주제별로 관련된 문헌들

을 참고로 하였고, 연구협력단과 관련전문가와의 워크샵⁶⁾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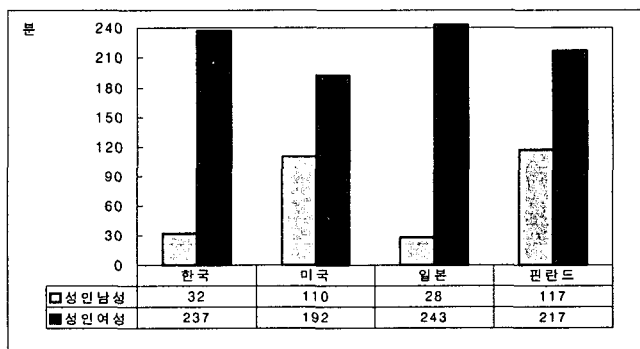
본 논문이 제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기혼여성의 사회참여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2. 전업주부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정책현황은 어떠한가?
3. 이러한 연구문제를 수행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어떤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가?

II. 기혼여성의 사회참여 현황과 문제점

1. 기혼여성의 사회참여가 제한되는 이유

기혼여성의 사회참여가 제한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가족 내 의무와 사회적 인프라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전업주부들은 가정이라는 사적인 부문에 고립된 채,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통해 노동력을 세대적으로 재생산하고 남편노동력을 일상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그림 1>을 보면 가사노동에 관한 남녀간 성별분업은 각 나라별로 공통된 면이지만 한국의 경우 그 정도가 더 뚜렷함을 알 수 있다(이기영, 2001).



(그림 1) 가사노동시간의 남녀별 국제비교 (요일 평균)

5) 중산층주부의 여가를 연구한 강정희(1995)는 사회활동의 범주에 종교활동을 포함하였으나 종교가 국가개입의 범위 밖에 있으며 개인의 선택임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였다.

6) 한국여성개발원에서 2001, 6, 28과 9, 8에 실시함.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인적자원정책 26번(2001년 12월 20일) 참고

1999년 현재 하루 평균, 전업주부는 6시간 43분을 취업주부는 평균 3시간 45분을 가사노동시간으로 보내고 있다(통계청, 2001). 주요 가사내용으로는 음식준비와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및 물품구입 그리고 가정경영이다. 이러한 무거운 가사부담이 전업주부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일차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 내 가사분담 등 양성평등한 문화의 형성과 정착은 기혼 여성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여성취업자들은 여성경제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가사가운데에서도 육아부담(31.4%)으로 꼽고 있다. 그 다음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관행 및 제도(28%), 채용·승진·임금·배치 등 불평등한 근로조건(13%)으로 꼽고 있다(통계청, 1999)

육아문제는 사회교육참여나 자원활동참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작용할 것이다. 육아로 인한 경력중단은 우리 나라의 보육체계에서 비롯된다. 2001년 현재 보육시설은 민간 보육시설이 58.6%, 놀이방 33.8%, 국공립 보육시설 6.6%, 직장 보육시설 1.0%이다. 현재 보육시설들이 대부분 일반 유아(3-6세)대상이어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0-2세 영아는 150,307명(21.4%)인데 반해 3세 이상 유아는 552,553명(78.6%)이다(중앙보육정보센터, 2001; 한국여성개발원, 2001에서 재인용). 방과후 아동보육 실태도 총 533개소로 사회복지관(273개소, 51.2%), 어린이집(121개소, 22.7%), 초등학교(24개소, 4.5%), 공부방(115개소, 21.6%) 등 양적인 부족뿐 아니라 아동보육도 아직까지 저소득층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및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수 방과 후 아동교실을 제외하면 운영상태가 열악하다(김태홍 외, 2001). 뿐만 아니라 시부모 모시기 등 탁·노 시설의 태부족도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

기혼여성을 가정내부로 묶어 두는 요인이 육아를 포함한 가정 내 책임의 전담이라고 한다면 사회로의 진입을 막는 주요 요인으로는 먼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적 관행과 육아휴직제나 가족간호제와 같은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의 미비를 들 수 있다. 같은 전공, 같은 자격증을 가지더라도 여성이 차별당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연도별 행정지도를 통한 고용차별 탐지 현황(노동부, 2001)을 보면, 801개 업체를 점검하여 50%이상에 달하는 401개 업체가 위반업체로 드러났는데 각각 사유는 성희롱예방

교육비 실시(217), 야간/휴일 근로인가 미취득(170), 고충처리기관 미설치 등(149), 모성보호(84), 임금차별(16), 모집 채용차별(13), 임금 외 금품차별(4), 정년퇴직차별(1), 기타(72) 이었다. 최근 여성들의 취업가능성이 높고 유망한 직종으로 전망되는 IT분야 등의 벤처기업도 채용차별이 심하고 밤새기근무 등 남성중심적인 노동시장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서 실제 고용에서 평등한 효과가 제거된다고 한다.

2001년에 총 60일이던 출산휴가가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90일로 증가되었다.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제도도 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최초 도입된 후, 95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활성화대책이 마련되고, 2000년도에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휴직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의 해고금지, 육아휴직종료 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명문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육아휴직 중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월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조항이 신설되었다. 장기간의 양양을 원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간호를 위해 3개월 이내의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인 가족간호제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민간기업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김태홍 외, 2001).

경제활동참가이외에 사회교육이나 자원활동분야는 성 역할 분담을 그대로 반영하고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여 주부들의 매력을 끌지 못하고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사회 내에 정착된 성차별적 구조를 해소하려는 시각과 여성의 인적자원을 주체의 입장을 배려하여 양성하고 사회적으로 활용하려는 시각이 합쳐져서 새롭게 정비되고 수정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2. 기혼여성 사회참여 현황과 문제점

경제활동 참가와 인적자원의 양성과 관련된 사회교육 그리고 자원활동별로 참가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자.

1)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현황과 문제점

기혼여성 경제활동참가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낮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30대에 나타나는 경력단

절 그리고 비정규직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노동시장의 특성에서 본다면 첫째, 남녀고용평등법의 한계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놓고 제재조항이 부족하고 간접차별과 작업장에서의 성적 희롱 금지조항도 부족하며 둘째, 여성에 대한 정부의 노동정책도 노동시장유연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노동은 남성이 맡고 가사노동과 아동양육은 여성이 맡는 성별분업에 기초한 것이어서 여성은 점점 더 파트타임의 임시직 노동자가 되어 주변화된 노동력이 되고있기 때문이다(Korean Shadow Report, 1998; Sanae Kora, 2000에서 재인용). 셋째, 기타 위에서 상세히 살펴본 보육시설의 미비와 여성의 가족에 대한 책임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측에서는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이 낮은 이유로 여성들의 상대적인 직업의식 결여나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들고 있지만, 이런 특성이 여성근로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일부 기인하기도 하지만 보육시설미비나 가사노동 등과 같은 가족책임을 전담하는데에서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성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하게 가정-직장을 양립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먼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1963년 37%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현재 48.3%에 이르렀다. 혼인상태별로 보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5년 44.7%에서 1995년에는 50.4%로서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웃돌고 있으며 전체 기혼여성 중 47.9%가 경제활동에 참가하였다(통계청, 2000, 2001). 이러한 증가추세로 인해 유배우가구의 29.4%이던 맞벌이가족의 비율도 1995년에 33.4%로 증가하였고 향후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 2000).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고⁷⁾, 현행 여성취업지원제도와 노동시장의 차별구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여 2010년이 되어도 51.9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정진화 외, 1999).

또한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역U자형을 보이는 선진국과 달리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참가율이 현저히 낮은 M자형을 띄어 자녀양육부담이 개별 여성에게 집중되어 노동시장경력이 단절됨을 의미한다<표 1 참조>. 이로 인해 여성의 인적자본의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며, 40-50대 여성의 노동시장복귀도 경력단절로 인한 노동력 가치의 저하가 크지 않은 저학력 단순노동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을 저조하게 만들며 내부노동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은 이후 정규직으로 재취업을 힘들게 한다(김태홍외, 2001).

이미정·정진성의 연구(1998)는 고학력⁸⁾ 기혼여성들의 인적자원이 직장-가정양립지원책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장되고 화이트칼라직에서의 기혼여성기피

<표 1> 연령계층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이상	전체
2000	12.5	60.8	55.9	48.5	59.1	63.4	64.6	55.2	50.8	29.8	100

자료: 통계청(2001), 「경제활동인구연보」

7) OECD에 의하면 한국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1.8%로 그리스 48.2 이탈리아 46.2 멕시코 41.2 보다 높고 일본 59.6 벨기에 56.6 룩셈부르크 51.7 스페인 51.8 등과 유사하나 캐나다 70.5 핀란드 72.0 프랑스 61.7 덴마크 75.9 미국 70.8 독일 63.2 노르웨이 76.5 등 제반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한국 여성개발원, 2001.2).

8) 대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의 경우 미국 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터키나 멕시코보다 낮은 54% OECD국가 중 최하위이다.

대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98, %)

구분	OECD평균	한국	일본	멕시코	터키	미국	스웨덴
여성	83	54	68	72	76	82	92
남성	93	93	98	96	89	94	9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인적자원정책 26번의 설명자료(174쪽)

〈표 2〉 성별 남녀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2000년)

단위:천명(%)

구분	전체임금근로자	상용고	임시고	일고
남성	7,849 (100)	4,650 (59.2)	2,058 (26.2)	1,141 (14.5)
여성	5,293 (100)	1,603 (30.3)	2,453 (46.3)	1,237 (23.4)

자료: 통계청(2001), 「경제활동인구연보」

〈표 3〉 연령별 취업희망 비경제활동 여성의 분포

구분	15-24세	25-29세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취업희망여성수 (비율%)	36,538 (12.9)	25,432 (9.0)	77,290 (27.4)	66,400 (23.5)	76,512 (27.1)	282,172 (100)

자료: 통계청(2000), 「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현상으로 인해 재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에 한정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대졸여성은 출산과 육아 후에도 재취업을 안하게 되고 그에 따라 증졸과 고졸 여성의 노동생애주기는 M자형을 보이는 반면 대졸여성은 L자형이다⁹⁾. 대졸여성의 영구퇴출은 우리 나라 인력활용에 있어 가장 심각한 낭비이다.

우리 나라 여성근로자의 종사 상 지위별 분포를 보면, 여성근로자의 69.7%가 임시·일용고이다<표 2 참조>. 이외 여성파견제나 시간제 근로자를 감안하면, 전체 여성근로자 중에서 약70%가 비정규근로자이며 비정규 고용형태의 경우 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김태홍 외, 2001).

여성경제활동참가에서 또 하나 최근 들어 창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몇몇 업종에 제한되어 있고 영세한 규모이다. 1999년 총 사업체 실태조사를 보면(통계청, 2000) 여성사업주는 98만 명으로 34%이고 여성벤처기업은 2001년 5월 현재 388개로 3.7%이다. 여성사업주의 사업분야는 숙박·음식점업(39.4%), 도매·소매업(31.1%), 기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11.0%), 교육서비스업(5.7%)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서비스, 전기·수도사업의 종사비율은 모두 합해 12.8%로 낮은 편이다. 규모에 있어서도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가 남성사업체 중 33.9%이나, 여성사업체에서는 5.2%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전업주부들이 가장 원하는 사회참여의 형태가

취업이다. 최근 서울시 전업주부 340명을 무작위표집한 연구결과에 따라 주부사회교육과 자원활동참여 및 취업희망의 비율을 살펴보면(정현희·구혜령, 2001)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비율은 77.6%이다. <표 3>의 전체 여성을 모집단으로 취업을 희망한 여성들의 연령별 비율을 볼 때, 30대(27.4%), 40대(23.5%), 50대 이상 중장년층(27.1%)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전업주부들의 취업희망의사를 엿볼 수 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취업되기 위해서는 취업 및 능력개발에 대한 일정한 상담과 함께 이에 기초한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하다.

2) 기혼여성의 인적자원 양성기회의 현황과 문제점
기혼여성의 교육기회는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개인의 발달에 기여하고 가정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취업과 소득향상의 기회를 주거나 자원활동에 필요한 소양을 기를 수 있게 해준다. 최근 들어서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전업주부의 경력을 인정해 특별전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2002년 입시에서 17개 4년제 대학이 주부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미주¹⁾ 참조) 백화점 등 민간부문의 문화센터, 비정부기구(NGO)의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등이 주부가 접근할 수 있는 주된 교육기회이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주부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9) <http://www.kwdi.re.kr>, 여성인력활용 선진화 방안. 심포지엄 지상중계. 경향신문 12.7일자

〈표 4〉 주부가 접근할 수 있는 여성평생교육기관

여성사회교육전담기관				여성이 주교육대상인 사회교육기관					
여성회관 및 부녀복지관	농협주부대학	농업진흥청 생활과학과	여성인력개발 센터	종합사회 복지관	구민회관 (자치단체)	신문사 방송사 백화점 종교단체 등의 문화센터	대학부설	여성단체	일반학원 (주부인터넷 교육)

자료: 김재인(2001)에서 재구성

것은 정보통신부의 주부인터넷교육사업이 있다.

〈표 4〉를 보면 여성평생교육기관 중 주부가 참여할 수 있는 곳은 1. 여성사회교육전담기관으로 ① 여성회관과 부녀복지관 ② 농협의 주부대학 ③ 농업진흥청의 생활과학관 ④ 여성인력개발센터 2. 주교육대상이 여성인 사회교육기관으로 ① 종합사회복지관 ② 구민회관(자치단체) ③ 신문사·방송사·백화점·종교단체 등의 문화센터 ④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⑤ 여성단체 ⑥ 일반학원이 있다.

2001년 현재 여성회관 89개를 비롯하여 시·군·구 및 농협의 구민회관과 대학부설 주부대학 등 1,362개소에서 교양/의식 관련 프로그램 3,090개, 예술/스포츠 4,641개, 직업기술훈련 7,752개, 전문교육과 학력인정교육1,146개 등 총16,942개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¹⁰⁾ 그러나 주부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강사충원과 재정에 있어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들이 자녀양육과 같은 중요한 관심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장소의 시설설비 또는 접근성이 주부들의 생활양식에 호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문화센터의 교육프로그램들은 교양증진 및 자질향상, 효율적인 여가선용 및 능력함양, 사회참여의식과 시민의식 개발 등을 교육목적으로 하여 취미교양교육과 사회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지만, 주부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백화점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은 성별분업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물질주의적 소비지향태도를 부추기고 있다. 흔히 백화점의 문화센터가 백화점내부에서 갖는 기능은 지하 슈퍼마켓이 분수효과로 고객을 동원하는 것과 같이 사외효과를 통해 주부고객을 동원한다. 그러나 아이와 함께 같은 시간대에 아주 가까운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주부사회교육방법에서 배울만한 점이라고 하겠다.

주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비정부기구들(NGO)의 경우에는 교육내용이 회원들의 주된 관심을 반영하며 친사회적인 진보적이고 전문적인 강사진들을 가지고 있고 참여율도 높으나¹¹⁾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위탁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인건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운영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예산만을 지원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강사들의 자원활동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가사나 육아 등으로 정규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주부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1년 현재 53개소 있으며 9천5백만원의 정부지원을 받는다.¹²⁾(여성부, 2001) 그러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정책대상집단이 일반여성이고, 기능과 훈련과목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회관과 중복되어 있

10) http://edu.kwdi.re.kr/user/main_Search.php

11) 한 예로 한국 소비자연맹의 경우 격주로 100%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소비자대학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 회 강의 실을 매월 정도인 80-100명 정도 참가하지만 강사섭외시 재정부족으로 자원활동수준에서 요청하고 있어서 정부 지원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교과과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2001년 9월 관계자 인터뷰).

12) 여성인력개발센터는 1993년에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설립되어 IMF이후 대량실업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여성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립을 확대하여 '97년 17개소에서 2001년에 53개소로 확대되었다.

〈표 5〉 여성들의 PC통신 및 인터넷의 주된 이용용도

신문보기	정보검색	교양교육 관련	게임 오락 등	채팅과 전자우편	예약과 전자상거래 등	공개자료실 이용	TV와 음악 영화 등	기타
4.4	34.2	13.2	12.7	23.2	3.9	3.3	4.6	0.6

자료: 통계청(2000), 「사회통계조사」

다. 또한 훈련과정이 6개월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역산업수요에 대응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할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직업훈련과 취업알선과의 연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김태홍 외, 2001). 결국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 등 지역에 여성직업훈련을 담당하는 훈련기관 수는 많은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을 통해 기혼여성의 취업가능성을 제고시켜서 안정된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기능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2000년-2001년까지 200만 명의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부에서는 컴퓨터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전업주부의 재취업 등 여성인력의 잠재력을 개발함을 목표로 전업주부의 정보리터러시의 수준을 높이고자 주부인터넷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800개 컴퓨터학원의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의 60%와 S/W 및 H/W구매를 지원하고 주부에게는 월 20시간 교육에 대한 수강료 20%할인과 PC통신 1개월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 주부인터넷교육 결과 인터넷에의 접근이 용이해져서 <표 5>에서 보듯이 정보검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전통과 단절된 현대 도시의 주부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래집단과 매스컴을 활용한다(Lopata, 1980). 인터넷 교육으로 향상된 주부들의 정보능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가정경영관련 지식을 공공재로 개발하여 일반주부수준으로 정교하게 가공하여 정부의 사이트에 제공한다면, TV와 신문과 사이버 공간 등이 제공하는 정보들에 대한 비판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주부인터넷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부를 단순한 정보의 소비주체로만 인식하여 초급수준만을 교육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단계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정보검색, 멀티미디어컨텐츠개발, 웹개발, 전자상거래 관리자 등 다

양한 내용의 과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주부들의 사회참여관련 정보 즉 주부취업 및 자원활동관련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자원활동 현황과 문제점

우리 나라 여성자원활동의 조직적인 최초의 활동은 1947년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부녀봉사대로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봉사활동을 주로 담당하였다. 전후 60년대까지는 적십자부녀봉사대 뿐 아니라 여성단체들이 전쟁 이재민에 대한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사회단체와 사회복지관 등에서 구호봉사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1973년 조직된 새마을 부녀회는 농촌여성의 사회성 발달과 자조정신 함양에 기여하여 여성들의 자원활동정신의 확산과 지역사회자원활동확산에 영향을 미쳤다(성경옥, 1983; 김성경, 1999에서 재인용). 80년대 중반까지는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형 자원활동을 하는 여성단체활동, 사회복지관과 적십자사 내의 여성봉사대 등 조직활동, 새마을 부녀회 등이 대표적이었으나 1986년의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올림픽대회를 통한 여성들의 자원활동의식 홍보로 성별로 분리된 여성들만의 활동에서 시민참여활동의 하나로 여성자원활동이 자리잡게 된다고 한다. 이후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의식화로 보다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민간기관 소모임 형태로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뿐 아니라 상담, 환경보호활동 그리고 생협활동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김성경, 1999) 현재 주부자원활동자의 전반적인 통계를 얻기는 어려우나 대략 여성자원활동센터 수는 2000년 현재 172개소이며 등록인원은 36,242명이고(여성특별위원회, 2000; 정민자·김명희, 2000에서 재인용), 2001년에 서울시 전업주부를 모집단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자원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20.8%였다(정현희·구혜령, 2001).

여성들의 자원활동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시각

은 상반된다. ThompsonⅢ(1974, 김성경, 1999에서 재인용)는 “서비스자원활동은 무보수 사회적 사용 가치를 창출하여 여성들을 초과착취하고 노동현장에서 여성의 고립을 촉진하며 임금노동이 남성만의 영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여성의 재정적 의존을 악화시키며 전통적으로 여성영역에 속해 있던 보호활동에 대한 성별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자원활동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남성들에 의한 종속을 강화하고 사회관계에 미봉책을 사용하여 사회변화를 지연시키며 여성들의 실현되지 못한 능력에 대한 동요를 막는 안전판을 제공한다”고 본다. 반면 Loeser(1974)는 “자원활동은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직업을 갖지 않았거나 중단했던 여성들에게 전일제나 시간제 직업으로의 전환을 도와주며 기술을 훈련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와 어머니의 생활에 묶여있는 여성들에게 좀 더 자유로운 여성이 되게 함으로써 여성해방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한다(김성경, 1999에서 재인용).

시민운동이 여성의 자원활동을 보는 관점을 보면 “여성들이 관대한 숙녀에서 적극적인 시민이 되는 것은 바로 자원활동을 통해서이며, 복지국가에서 필수적인 시민활동인 자원활동은 정부영역이 아니면서 공익을 추구하고 또 민간영역이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제3의 영역에 속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김성경, 1999).

이 세 가지 시각을 종합해 볼 때 자원활동은 가부장적인 시각을 벗고 제한적이거나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식을 고양하는 계기로 사용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주부들이 참여하는 자원활동은 아직까지 ThompsonⅢ가 지적한 부정적인 모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김성경(1999)은 여성자원활동자의 활동분야가 사회복지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활동내용도 생활보조활동이 59.7%를 차지하여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부분보다는 단순한 분야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에서의 자원활동에 관한 통계에서도 자원활동의 성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조사(현영현, 2001)에 의하면 1999년 현재 자원봉사자의 직업 중 주부가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재가복지·경로식당·탁아 등에서 여성자원활동이 많고 행사지원·의료보건·

운전 등과 같은 영역에서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다(미주¹⁾ 참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도시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주부의 자원활동이 종교단체에서 하는 단순노력봉사에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김소영, 2000). 따라서 자원활동에 대한 잠재적인 욕구에 비해 주체적 참여의욕이 낮은 것은 당연한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인적자원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별화 문제 뿐 아니라 주부들의 자원활동을 통한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해 몇 가지 문제점을 더 지적해 보자. 먼저, 사회적으로 자원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결과 자원활동을 수요로 하는 잠재적인 수요자들의 요구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2001)의 ‘21세기 한·일 평생교육의 현황과 발전전망’에 따르면, 수도권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문화센터 등에서 수강중인 1,54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43%가 자원봉사와 지역공동체 운동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자원활동자들의 현재 활동내용과 희망하는 활동내용이 불일치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현 자원활동 중 사회복지분야의 생활보조활동은 59.7%인데 희망하는 비율은 18.7%로 대폭 하락한 반면, 문화예술 스포츠분야의 봉사활동은 현재 0.8%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나 희망율에서는 11.3%를 보인다고 한다(김성경, 1999). 또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전담인력이 없고 모집과 교육 및 훈련 그리고 배치 등의 관리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리더십에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다. 자원활동지원체계도 이동비용이나 식비 등 최소한의 비용이 지불될 수 있고 자원활동기간 중 상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대화되어야 한다(한국여성민우회 관련자 인터뷰, 2001년 9월).

Ⅲ. 전업주부의 사회참여 지원 정책

이상에서 기혼여성의 가정 내 책임과 남녀차별

적인 노동시장 및 그로 인한 낮은 취업률,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사회교육과 자원활동분야의 한계 등을 살펴보았다. 육아지원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기본적인 사회적 인프라로 보고, 취업과 사회교육 그리고 자원활동분야에서 주부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전업주부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1) 보육인프라

전업주부의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보육인프라 관련정책을 제안해보자.

첫째,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19,533개소 중 6.5%밖에 없어 민간이 주도하는데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앞서 지적인 영아나 장애아 등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둘째, 보육시설의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관리 및 점검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관리를 통한 보육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접근가능성이나 비용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수요자가 요구하는 일정 수준이상의 질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열악한 수준의 보육만이 가능하다면 주부들은 취업이나 기타 사회활동을 포기하고 육아를 담당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다양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육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연장, 야간 및 24시간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채워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81년에 연장·야간 보육사업 활성화를 마련하였다. 또한 장애아 대상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 일반 아동에 비해 소수인 장애아를 가진 주부의 경우 취업단절이 필연적인 것처럼 인식되지만 그런 경우 보다 전문적인 보육이 요구되고 그에 따라 소득에 대한 필요도 더 요구되기 때문이다.

넷째,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정책은 초기단계인데, 방과후 아동보육의 운영 방향이 설정되고 주무부처가 확정되어야 하며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이 정비되어야 한다.

2) 남녀평등한 노동시장 환경 구축

남녀차별적인 노동시장을 보다 평등한 노동시장으로 수정하기 위해 두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캐나다와 미국 호주에서 실시하는 계약준수프로그램(Federal Contractors Program for Employment Equity) 내용을 참고로 하여(김태홍 외, 2001), 고용평등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로써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정부포상이나 세제지원, 정기근로자감독 면제, 공기업경영 평가 시 가점부여 등 행정상 우대와 융자 및 대출금리 우대, 상환기한 연장, 신용보증 시 보증한도 우대 등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물품 및 용역 조달체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출산·육아휴직과 가족간호제도와 관련된 법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출산·육아휴직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감독과 법칙을 강화해야 한다.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선도해 온 일본에서는(김태홍 외, 2001) 가족간호를 위한 휴업제도를 실시한 중소기업사업주에게는 한 사람 째는 75만엔, 두 사람 째는 20만엔, 대기업사업주에게는 한 사람 째는 55만엔, 두 사람 째는 10만엔의 장려금을 '99년 이래 지급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근로자의 보육 및 가족간호비용과 관련된 재정 지원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비용의 일정 비율을 재정 지원한다고 한다.

2. 전업주부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여건의 조성

첫째,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가정경영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주부집단별로 특화하여 on-line과 off-line을 통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부가 주도한 주부인터넷교육을 통한 기술적인 측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되 가정경영의 세부적인 측면에까지 지식과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공공재로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여성부의 Women net 또는 여성사회교육전담기관이나 여성을 주 교육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기관을 통해 보급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오노 테루코, 2001) 문부성산하의 국립여성교육회관이 여성교육진흥을 위한

여성교육지도자 및 관계자 연수, 국제적 및 전국적 교류기회의 제공,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센터의 개설 및 여성교육과 가정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off-line상의 교육프로그램은 기혼여성이 가정에서 나와 성찰적으로 삶을 모색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로 접근하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단위 교육기관이 가정경영과 사회의식 그리고 재취업이나 신규취업으로 연결을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현단위에 하나씩 있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생애학습센터는 일반적인 주부 사회교육강좌와 재취업강좌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¹³⁾. 한 기관에 양자가 다 포함되는 경우보다 기존의 특화된 기간간 연계를 원활히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저소득·저학력 여성의 학습기회를 보장하는 정부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이 남녀평등하게 수경된다는 전제하에 학력수준에 따라 임금들이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빈곤 등으로 학습기회를 잃은 저소득·저학력 주부들에 대한 재정지원과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Susan Golonka, 2001) 저소득층 주부의 교육지원 정책으로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가 있는데 이 기금으로 저소득층 혹은 복지수혜대상 주부가 교육지원을 통해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된다. 또한 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미국의 New Chance Program(Janet C. Quint, 1997)은 미혼모를 포함하여 저소득층 젊은 주부를 대상으로 삼아 개인의 책임과 직업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성인교육과 직업교육 그리고 건강교육과 가족생활상담 등을 포괄 교육하였다. 프로그램의 모델은 비영리 중립조직체인 MDRC(Manpower Demonstration Research Corporation; 빈민의 복지와 자립성을 고양할 수 있는 initiatives를 개발하고 연구함)가 담당하였으며 총 18개월에

걸쳐 실시되는 두 단계교육으로서 제1단계에는 가) 취업준비요소로서 성인기초교육과 GED준비, 경력탐사, 취업전 기술훈련을 그리고 나)개인적인 발달과 아동발달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생활기술과 기회에 관한 커리큘럼 건강교육과 건강관리서비스, 가족계획, 성인생존기술훈련, 부모교육, 소아건강서비스교육이 포함되며, 제2단계에는 가)취업준비요소로 직업기술훈련, 근로인턴십, 직무배치 보조가 포함되며 나)사례별 관리와 아동보육이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실질적으로 교육적 성취와 훌륭한 아동양육의 활용 부모역할 기술향상 반복임신의 효과적인 감소를 가져왔지만 노동시장의 관행이나 빈곤을 양산하는 사회적 요인이 병행하여 변하지 않음으로 인해 아직도 젊은 엄마 중 80%이상이 복지대상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저소득·저학력 주부의 교육기회 향상의 일환으로 아직 소수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부에 대한 특별전형을 국립대학에서 시범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다른 대학들로의 파급효과를 꾀할 수 있다.

셋째, 친사회적 양성평등적으로 주부인적자원을 양성하는 효과를 내는 NGO의 주부교육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미 주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NGO는 여성사회교육기관들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세부영역에서 교육의 전통과 내용 그리고 방법론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단지 재정지원을 하거나 우수 교육사례를 표창하고 홍보함으로써 함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부교육에 있어서 상호협조체제를 가질 수도 있다. 독일의 주부연합(Deutscher Hausfrauen-Bund)의 경우에는 가정경영관련 정보와 지식을 개발·보급하고, 이 영역에서의 직업개발과 주부교육을 통한 배치 등의 활동에 주력하여, 가정경영에 익숙한 일반주부들을 공식적 교육체제를 통해 고급·전문적 가정경영인으로 양성하고 그 전문성에 따라 일반가정의 도움미로 증개할 수도 있고 양로시설 및 가족휴가시

13) 한 예로 에히메 생애학습센터는(<http://joho.ehime-iinet.or.kr/jigyoo/index.htm>) ① 건강의학과 문학, 역사, 인간담구, 법률 등으로 구성된 교양코스와 ② 환경·스포츠레크리에이션·실용영어회화·컴퓨터로 구성된 특별코스가 외에 ③ 1996년 남녀공동참획기본법 발표이후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주부를 위해 리커런트코스(recurrent course)를 운영하여 출산·육아로 익히지 못한 비즈니스매너와 비즈니스컴퓨터, 비즈니스영어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설·장애인 시설 등 공공가정의 부양자와 관리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¹⁴⁾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여성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정보·자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지원하는 공적 교육의 체험을 통해 사적인 공간의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인적자원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참여의욕을 고취시켜 가정경영을 전적으로 하더라도 사회적인 의식과 정보화사회의 흐름에 발맞출 수 있는 주부로서 그리고 자원활동과 취업을 할 때에도 더욱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직장 복귀프로그램 및 취업희망 여성 능력개발 정책

먼저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또는 가족간호를 위한 휴직기간 중에 놓친 직장에서의 업무흐름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직장복귀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김태홍 외, 2001:189) 육아휴직 종료 직전 3개월 동안에 3일 이상 또는 가족간호휴직종료 직전 1개월 동안에 3일 이상 직장복귀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직장복귀관련 정보 제공, 재택강의, 직장환경 적응강의, 직장복귀 직전강의, 직장복귀 직후강의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

둘째, 취업희망 주부를 위하여 ① 교육훈련체제를 정비하고 취업과 연계된 여성직업능력훈련을 실시하며 ② 인력개발센터의 교육기능을 전문화·강화하고 종합능력 개발 상담창구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고용능력개발기구 도도부현(雇用能力開發機構 都道府縣)센터에 능력개발지원코너인 총

합상담창구(總合相談窓口)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비정규 여성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였거나 특화시킨 직업훈련정책은 없다(김태홍 외, 2001:187). 일본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능력개발 촉진을 위해 직업능력개발기구의 지방기구에서 시간제근로자를 위한 10일 과정의 단기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실상 전업주부가 가장 손쉽게 취업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비정규직이므로 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취업희망주부에 대한 직업훈련은 노동부와 여성부가 각각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2001)에서는 주부 및 50세 이상 고령자 등 통상적인 조건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단기 직업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단순서비스 및 틈새직종 등 고용수요가 있는 21개 직종을 선정하여 1-3주 과정의 적용훈련을 시킨다. 여성부에서는 미취업 여성을 정보통신분야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12개 대학과 연계하여 2000년 480명을 훈련시켜 68명만이 취업하였다(김태홍 외, 2001:187).

그러나 현재 취업희망여성들을 위한 제반 교육제도를 정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직업능력개발과 취업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여성의 기초직업능력을 개발하는 훈련과정은 시간제 등 비정규 고용형태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6개월 미만의 과정과, 재취업희망 여성¹⁵⁾을 위한 직업의식 교육과, 전문적인 직업능력을 원하는 경우 전문자격과 사무직에 필요한 전문훈련과정을 특화하여 운영해야 한다(김태홍 외, 2001:193).

셋째, 주부창업이 용이한 분야의 창업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투자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 주부의 창업지원 측면을 보면 신 산업과 지식 집약적 창업분야 중 주부가 접근할 수 있는 분야를 발

14) www.europa.eu.int/comm/employment_social/equ_opp/strategy_de.html.

15) “해고된 가정주부(dismised homemaker)를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필요한 이유는 그들은 소득을 잃어 훈련을 위한 비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이 필요하고 프로그램들은 그들의 특별한 요구 즉 직업준비상담, 동료집단서포트, 비전통적인 직업에 취업하기 위한 훈련에 가정주부로서 발전시킨 기능들과 과거 노동경험이나 자원활동경험을 조합하여..... 등을 포괄하는 교육적인 기술을 가지고 접근하는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John H. Gibbons, 1985; iii).

굴하고 그에 맞는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콘텐츠, 디자인, 생명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유망 전문창업 및 벤처창업 아이템의 발굴이 선행되고, 신규 및 재취업 여성 대상 e-business 등 창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산시켜야 한다. 미국중소기업청의 여성창업자금WGCF(The Women's Growth Capital Fund)와 같이(올란드 팀, 2000)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일부 출자하여 추가적인 여성투자기금이 조성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자금도 여성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을 확대하여 경영컨설팅 서비스의 내실화하고 창업자에게 전략적 조언, 시장분석, 사업개념의 형성 및 구체화, 투자유치 대비, 인력·자금원의 발굴 등의 서비스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창업보육시설 평가지표가 개발되고 도입되며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4. 자원봉사영역에서의 고용창출과 각종 인정·보상제도의 마련

먼저 자원활동영역의 성별화를 철폐하고 전국차원의 통합적 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최근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등의식교육과 여성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노력의무를 갖도록 하며, 여성직업훈련기관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자원봉사활동사업의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어 통과시 주부인력개발,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가능성이 더 넓게 열린다고 할 수 있다. 주부를 무임의 가사노동자로 여기고 가사노동과 유사한 서비스에 배치하는 등 무의식 중에 성별화를 강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차원의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전국을 하나로 묶는 자원활동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원활동영역에서 주부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접근법을 직업훈련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존 자원봉사인력활용기관을 직업훈련의 장으로 개방하여 훈련기간동안 일정정도의 보수를 지불하고, 수료 후 경력으로 인정하는 주부인턴십 방안이 그 것이

며 직업으로 전환 가능한 영역의 발굴을 위한 조사와 사회복지재정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등에 가정생활복지를 협조하는 담당자를 통해 가정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정부가 증개함으로써 새로운 자원활동과 타아와 탁노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본의 가족지원센터(family support center)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市·町·村이나 공익법인이 육아원조를 받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사람을 모아 만든 회원 300인 이상의 조직으로 정부는 어드바이저의 사례금을 보조한다. 어드바이저는 회원을 모집하고 상호원조활동을 조정하며 지역간 연락조정 및 상사회 및 교류회 실시를 담당한다. 회원간에는 보육시설 개시전 후 공백 시간에 아동을 보호하고 보육시설에 데려다주기 및 방과 후 아동보호 등을 맡고, 아동의 가벼운 질병이나 임시적 돌발적 사태에 종일 아동을 보호하는 일을 원조하고 상호간 또는 회원조직에서 합의한 최소한의 사례를 주고받는다. 각종 사고에 대비 보험은 필수이다. 육아를 여성의 일차적인 책임으로 하며 여성간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경향에 대하여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한시적으로는 시도할만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원활동누진제와 각종 인정과 보상체계 등 자원활동촉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원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활동비를 확대제공대하고, 자원활동누진제, 증서발급, 문화행사초대, 우수자원활동자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 공식적인 인정 보상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자원활동은행체제를 통한 자원활동의 성과 공유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본의 경우 하츠라츠서비스라는 가정생활주기 개념을 활용한 적립식 자원활동체계가 사례가 될 수 있다. 육아원조가 필요한 젊은 주부가 자원봉사은행에서 먼저 서비스를 꺼내 쓴 후 육아를 종료하고 시간여유가 날 때 다른 사람의 육아보조를 위한 자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리 노후 생활보조를 위한 자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신의 노후에 필요한 서비스를 꺼내 쓰는 방법이다. 또한 새로운 자원활동영역의 개발될 필요가 있다. 공적인 업무나 정치·사회 각 분야의 감시활동 등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생명을 낳고 기르는 데에서 얻어진 경륜이나 관점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업무와 정치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 및

사회감시활동에 주부 참여를 당연시하고 시·군·구의 지역사회계획 및 경영, 주택공급 및 공원 등 공공재개발이나 어린이 광고나 식품위생과 안전 등에 관한 입법 등에 주부단체와 조직망을 통한 의견개진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주부인적자원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활동(박혜인, 2001)이 개발된다면 주5일 근무제를 맞아 가족들의 공동체함과 여가활용으로 자원활동이 각광받을 것이다.

IV. 결 론

본 논문은 국가인적자원 기본계획에서 그 동안 사회적으로 차별 받아 온 여성인적자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쏟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주부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측면에서 주부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목표로 하였다. 전업주부에 관한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정책은 개인적으로는 주부들의 삶에 대해 보다 많은 대안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그로 인해 가정을 풍요롭게 하며 국가적인 경쟁력도 강화시켜 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주부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해온 가정 내 책임과 관련된 보육시설 그리고 사회참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취업에서 장벽이 되는 남녀차별적인 노동시장관행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 본 후 취업에 사회교육과 자원활동을 더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주부들의 정보소의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사회적으로도 사장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 제시한 정책대안 중 채택되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다음과 같다(<http://www.moe.go.kr>). 먼저 보육인프라와 관련하여 ①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의 확대 ②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보육형태-시간제 보육, 방과후 보육, 전일제 보육, 휴일 보육 등-의 확대 둘째, 남녀 평등한 고용환경의 구축과 관련하여 ① 남녀고용 평등 실천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강화 ②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 도입 셋째, 취업희망 주부와

관련하여 ① 휴직 후 직장복귀프로그램의 개발과 비정규직 ② 여성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③ 취업희망 주부인력의 창업 등에 대한 지원강화 넷째, 전업주부교육 및 자원활동과 관련하여 ① 전업주부에 대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지식정보화 관련 교육활동을 확대 ②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보상기능의 강화 및 공공업무, 정치영역 등 새로운 자원봉사영역의 개발하는 정책 등이 건의되었다.

각 정책은 여성부와 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가 수용하여 세부적인 지침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하게 된다. 꾸준히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여성계의 관심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아 건의한 본래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국가정책차원에서 전업주부의 인적자원개발을 놓고 최초로 탐색한 글이어서 많은 경우 기존의 실행이나 연구문헌에 근거하지 못한 다소 추상적이고 당위성에 기댄 주장을 띤 한계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해외정책의 사례들도 선례로서 소개되었으나 다수의 국가들을 살펴보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고 해외거주 학자들과의 협조와 인터넷을 통한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과 미국의 사례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국가의 좋은 사례들이 소개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실패한 사례들로부터도 배울 수 있을 것이지만 보다 그러한 사례들을 찾아내는 데에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해외정책의 사례들이 우리나라의 실정과 시기상 잘 맞을런지의 타당성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업주부의 길을 택하던지 취업의 길을 택하던지 아니면 사회교육과 자원활동을 조합하여 삶을 꾸리던지 모든 경로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는 점진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주부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자원의 재분배가 형평성있게 이루어 질 것이며 이제까지 정책의 소외계층이던 주부들이 그림자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것을 다소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전업주부, 인적자원, 경제활동참가, 사회교육, 자원활동

참 고 문 헌

- 김선미·이승미(2000). “가사노동을 통한 주부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논의” 한국가정과학회지 제3권 제2호:47-57.
- 김성경(1999). 여성자원활동의 현황과 육성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김소영(2000). 주부의 자원활동 참여 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재인(2001). “21세기 한국의 여성평생교육 발전배경”, 21세기 한·일 여성평생교육의 현황과 발전전망, 한국여성개발원, 3-22.
- 김태홍 외(2001).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여성부.
- 노동부(2001). 여성과 취업.
- 매일경제신문사(2001). 우먼코리아.
- 박혜인(2001). 가족복지적 관점에서 본 자원봉사의 의의와 역할, 한국가족복지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1-13.
- 여성부(2001).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침.
- 오노 테루코(2001). “행정시책으로 본 여성의 생애교육학습의 동향” 21세기 한 일 여성 평생교육의 현황과 발전전망, 한국여성개발원, 35-46.
- 올란도(2000). 2000년 세계청년탐구단 하반기 보고서-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여성인력 활용 -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미정, 정진성(1998). “여성의 교육수준향상과 노동시장참여”, 1980-90년대 한국의 여성 지위변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보고서, 46-79.
- 이기영(2001). 국민생활시간활용의 국제비교. 통계청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장혜경 김영란(2000). 전업주부의 심리·정서적 안녕과 갈등예방을 위한 제언, 한국여성개발원.
- 정민자·김명희(2000). 여성자원활동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논문집 2(2), 63-83.
- 정진화외(1999). 지식기반사회 여성인력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개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정현희·구혜령(2001). 도시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실태에 관한 연구, 21세기주부문화연구소 내부자료.
- 통계청(2001). 경제활동인구연보.
- 조혜정(1994). “가정과 사회는 여성의 힘으로 되살려질 것인가?” 주부 그 막힘과 트임,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45-68.
- 통계청(1999). 한국인의 사회지표.
- 통계청(2000). 사회통계조사.
- 통계청(2001). 경제활동인구연보.
- 한국여성개발원(2001). 21세기 한 일 여성 평생교육의 현황과 발전전망, 한국여성개발원.
- 한영현(2001).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복지공동체의 구축, 광주대학교 출판부, 41-63.
- Elizabeth B. Goldsmith(2000). *Resource Management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p. 81. New York: West Publishing Company.
- H.Z.Lopata(1980), *The Occupation ; Housewives*.
- Janet C. Quint, Johannes M. Bos, Denise F.Polit(1997). *New Chance ; Final Report on a Comprehensive Program for Young Mothers in Poverty and Their Children, Manpower Demonstration Research Corporation*, October.
- John H. Gibbons(1985). *Displaced Homemakers; Programs and Policy-An Interim Report*, Washington, DC; U. 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OTA-ITE-292, October.
- Lowser, H. (1974). *Feminism and volunteering: Women, Work and volunteering*. Boston; Beacon Press. 26-33.
- Ruth Sidel(1996). *Keeping Women and Children Last: America? War on the Poor*. New York: Penguin Books.
- Sanae Kora(2000). *Women in the Corporate World ; Career Paths; Choices and Alternatives for Women*, Pacific Rim Program Fellow 2000, Nomura Research Institute, Ltd.

미주 1) 대학의 주부 특별전형

학교	자격	전형방법	모집인원
경남대학교	고졸전업주부	학생부 90%+나이 10%	(야간)총 계 690명 중 50명
경성대학교	만25세이상의 주부	학교생활기록부 100%(500점) (수능을 응시한 검정고시출신자는 비교내신 적용, 수능을 응시하지 않은 검정고시출신자는 최저점수 부여) ※학교생활기록부상 학년석차를 알 수 없는 것은 학급석차, 석차를 알 수 없는 것은 최하등급을 반영한다.	▲28명:문과대학(사범계열 제외), 법정대학, 상경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멀티미디어대학(커뮤니케이션학부, 정보과학부, 디자인학부만 해당), 신학대학(신학과만 해당) 각 4명
광주대학교	고졸전업주부	학생부100%	주간2,240중 20명, 야간1,035중 10명
광주여자대학	고졸전업주부	학생부100%	1,120명중 레저스포츠학과 1명 문예영상학부 5명
대구가톨릭대학교	2002년 3월 1일 현재 결혼한지 만1년 이상된 주부 ※ 단, 교리교육학과 지원자는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에 한함.	학생부70%+면접30%	3,731명 중 24명
대구대학교	2002년 3월 1일 현재 결혼한지 만 1년 이상 된 주부	학생부70%+면접30%	4,761명 중 30명
대전대학교	주부경력 10년	학생부 80%+면접 20%	10명
동신 대학교	전업주부 연령 제한 없음	교과성적 80%+출결 20%	1,085명 중 14명
동의대학교	고졸전업주부	학생부 80%+서류심사20%	4,028명 중 47명
목원대학교	주부인 자	학생부100%	6명
배재대학교	고졸, 결혼 5년이상 경과한 자로서 30세 이상으로 현재 대전·충청남·북도 거주자	학생부100%	18명
부경대학교	1971년 8월 31일 이전 출생한 주부로서 고졸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 불가)	1단계-학생부 100%, 2단계-학생부 80%+면접20%	18명
부산외국어대학교	고졸자로 만 30세 이상인자	내신80%+면접20%	17명
상지대학교	만 30세이상의 전업주부	학생부95%+면접5%	정원내 32명
서남대학교 (남원 캠퍼스)	전업주부		5명
순천대학교	결혼5년이상주부	면접80%+학업계획서 20%	5명
안양대학교	고졸전업주부	학생부 90% + 학업계획서 10%	1,270명 중 4명

미주 2) 직업별 일반 자원봉사자 수

직업	참여인원	비율(%)
가정주부	51,641	44.6
대학생	18,989	16.4
회사원	8,105	7.0
이 미용사	60831	5.9
자영업	4,168	3.6
의사 약사	3,821	3.3
전문기술인	3,358	2.9
직능단체	2,084	1.8
공무원	1,042	0.9
운전기사	926	0.8
변호사	347	0.3
기타	14,475	12.5
계	115,787	100

자료 : 1999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조사, 현영현, 2001; 45

세부사업별 남·녀 일반 자원봉사자 참여인원

세부사업	남성비율(%)	여성비율(%)	합계
재가복지	27.8	37.6	35.4
교육과 훈련	10.9	10.8	10.8
경로식당	0.9	13.0	10.3
행사지원	14.2	8.3	9.6
의료와 보건	21.6	6.0	9.5
상담	5.5	5.1	5.2
이용과 미용	4.6	5.0	4.9
사무보조(행정)	3.8	4.0	4.0
운전	3.8	0.5	1.2
탁아보조	0.0	0.5	0.4
정신보건	0.5	0.3	0.3
독육	0.3	0.1	0.2
재활용센터	0.0	0.2	0.1
기타	6.1	8.6	9.1

자료 : 한국사회복지관협회조사, 현영현, 2001; 44

Susan Golonka(2001). Opening Doors; Expan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Low-Income Workers, Manpower Demonstration Research Corporation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Center for Best Practices.

ThompsonIII(1974). "Are All Women Service Volunteer Super-Exploiter? ; The Case of Rural Emergency Medical Service Volunteers",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26(3), 11-19.

(2001. 11. 30 접수)